

구조조정 고찰



김 정 원

1998년 초부터 지금까지 전국민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는 IMF로 대표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퇴출 등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원래 구조조정이란 사회가 진전되어 가면서 인간의 생활에 편리한 새로운 도구가 발명이 되어 보급되기 시작하면 기왕에 사용되고 있던 도구는 계속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멸

약력 : • 73~78 포항종합제철(주) 전산계획과장 • 79~91 한국화장품(주) 기획이사 • 91~98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본부장, 문화진흥본부장, 연구위원 • 98~현재 (주)마이다스텍 경영전략 연구소 소장

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산시설이나 유통구조등이 새로운 도구로 이전되어가고 소비자의 이용행태나 사회구조가 새롭게 전개되어 지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생태계에 반복 사용하는 기능은 진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퇴화되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하여 신제품개발, 신공법의 개발등을 통하여 구조조정등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사회는 진화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은 곧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구조조정의 의미가 인력감축, 예산삭감등으로만 인식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외환위기 즉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이 많아서 갚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여, 그동안 부실화되어 있는 기업을 위시하여 각급기관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우선인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구조조정” 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무조건 조직축소, 인력감축, 예산삭감등의 방법만 동원하다보니 국가사회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까마득한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정보산업분야만 하더라도 그동안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보사회에 대비해서 투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접해 보기도 전에 퇴보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즉 그동안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기술적 추진력」 측면으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사회적 견인력」의 불균등한 발전은 정보화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정보화 수요창출의 한계를 초래함으로써 고도 정보사회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를 올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상응하여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의식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란 명분하에 「사회적 견인력」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의 축소, 사업의 축소, 인력감축, 예산삭감등은 정말 유감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특정의 어느 한 기관일이 아니고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정보화추진 사업의 취소, 보류, 축소등이 발표되고, 이것과 연관지어 전담인원의 축소등이 뒤따라, 갑자기 정보화분야 중견전문인력들이 실업의 대열에 서게되는 불행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의 경제불황기에 정보화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1990년대 경제호황기를 맞아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은 1980년대의 호황기에 정보화부문 투자를 소홀히 하여 지금의 경제상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미국과 일본의 현상을 대비 분석해 보더라도 정보화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구조조정은 내부절차의 개혁, 혁신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보화근로사업」이 정책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실업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기술의 향상이나 정보산업계의 경영개선 내지는 우리사회의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어려운 현재의 경제사정 아래에서도 정부는 물론 우리 정보처리 전문가 일동은 정보산업계의 시장질서 회복과 아웃소싱의 활성화, 정착화를 추구하여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